

## “수도권발 코로나 유입 막아라” ... 가족·친지 방문 자제 요청

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남도, “노약자에 치명적 ... 공동체 위해 집에 머물러 달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 발생이 없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조건부’(오전 1~5시 영업 금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다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제한 시설 33종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가능하다. 공공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 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수능이 임박한 고 3만 매일 정상 등교할 수 있다.

10월 동안 지역내 신규 감염자가 없는

데도, 광주시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연휴 이후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같은 패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동과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며 “부디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잠시 미루고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복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남 “공무원 피살, 남북이 공동조사 하자” 북 “영해 침범 중단 ... 시신 수습시 송환”

청와대와 정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도 이날 남한 측의 시신 수색 작업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자체 수색에서 시신 수습시 남측에 송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 3, 4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한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계획임을 알리고 시신 수습 시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

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을 통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북한 측이 주장해온 영해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석 이슈 부상

소모적 논쟁보다 통합 위한 신뢰 구축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 ‘시대 정신과 대세’라며 그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역시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통합 논의와 함께 균형발전 이념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 추사에서 “생활권이 비슷한 지자체가 통합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 대세”라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체 면적 11.8%의 수도권 인구가 전국 146만, 전남 186만으로 거대 수도권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22개 전남 지자체 중 18개가 30년 내 사라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낙후를 해결하려면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은 2022년 통합해 광역단체장을 한 사람만 뽑는다.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자체장을 해보니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이 엄청났다”고 설명했다.

영상으로 추사를 보낸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인구, 기업, 일자리, 의료, 교육, 연구 개발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에 편중됐다.

지방은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소멸 위기에 있다”며 “위기에 맞서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함께 추진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을 위해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재정 분권이 이뤄지고 농협, 수협도 농도인 전남도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추사에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행정 통합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만우행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4차 연석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대로 603(문흥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GLA 250 4MATIC (배기량: 2499cc, 출력: 184kW, 250PS, 0-100km/h: 7.2초, 최고속도: 200km/h, 연비: 10.0L/100km)  
GLB 220 (배기량: 2199cc, 출력: 150kW, 204PS, 0-100km/h: 7.2초, 최고속도: 180km/h, 연비: 10.0L/100km)  
GLB 250 4MATIC (배기량: 2499cc, 출력: 184kW, 250PS, 0-100km/h: 7.2초, 최고속도: 200km/h, 연비: 10.0L/100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곱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